

서울시의회, 국민권익위 ‘청렴 노력도’ 평가 100점 만점 1등급 달성



서울특별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3등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의회가 청렴도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높은 성과이며,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달성한 성과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노력도는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달성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청렴도 평가를 받기 시작한 2013년 이래, 2020년 단 1차례 3등급 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4~5등급에 머물며 고전해왔으나, 올해 전방위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마침내 만점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는 부패인식과 경험을 측정한 '청렴체감도(60%)'에서 3등급(68.1점), 반부패 추진실적과 성과를 측정한 '청렴노력도(40%)'에서 1등급(100점)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종합청렴도가 8.5점 상승한 결과이다.

서울시의회는 연초부터 청렴도 취약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내·외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3개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확정하여 상시 점검해 왔다. 특히 시의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청렴 환경을

조성하며, 공직 내부에 청렴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 있는 노력을 펼친 것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올해 1월 「서울특별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반부패 제도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4월, 5월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회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을 제·개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어 9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국외출장 조례」 개정으로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시민 대중적 관심을 끌기 위한 대외적 노력도 강화했다. 청렴이라는 주제를 시민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을 제작·발행하였으며, 지하철 내부·엘리베이터 TV·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 청렴 활동들을 홍보하여 대중적 관심을 유도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집행부 및 의회), 교육청 등 72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정)의 3개 영역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한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청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며 “청렴이 일상이 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 청렴슬로건 공모전과 청렴 다짐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정성 기자

서울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건의안 의결 및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 국민의힘 광진4)는 2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제3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이후, 총 3차례의 회의 개최와 고려대 안암병원, 강남메디컬투어센터 등 주요 의료관광 현장을 방문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또한 지난 11월 5일에는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료관광 규제, 비자 제도 개선, 불법 브로커 문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등 현장에서 제기된 핵심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건의안은 의료관광 비자 절차 간소화, 불법 브로커 근

절, 의료광고 규제 개선,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통역 서비스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혜영 위원장은 “6개월 동안 의료기관과 업계,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건의안에 반영했다”며 “서울이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료관광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의료관광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하겠다”며 “특히 이번 건의안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관광특별위원회는 김혜영 위원장(광진4), 이종배 부위원장(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비례)을 비롯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 고광민(서초3), 김길영(강남6), 김용호(용산1), 김태수(성북4), 김형재(강남2), 옥재은(종구2), 이상욱(비례), 이종환(강북1), 황철규(성동4)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박강산(비례), 우형찬(양천3), 한신(성북1) 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 -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바탕으로 -」 토론회가 12월 22일(월) 팔달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경기도 전통시장은 일몰적·행사성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별 활성화 단계 진

단을 바탕으로 점포와 거리 경쟁력을 핵심으로 한 맞춤형 개발 전략과 가치사슬 기반의 경영형 혁신모델로 전환해야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언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충한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회를 단순 수혜자가 아닌 ‘경영 주체’로 전환해 단계별·유형별 맞춤 지원과 장기 전문경영(PM) 체계를 결합하고, 브랜드·디지털·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 거점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전통시장 정책은 시설 개선에 머무른 기존 지원을 넘어 상권 자체를 개발하는 관점으로 전환하고, 강릉·서귀포 사례처럼 지역 고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상권 생태계를 구축하며, 맞춤형 지원과 상인 역량 강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권 중심 논의를 넘어 개발 점포 혁신과 상인회 역할 확대에 초점을 두고, 강릉·서귀포 사례처럼 리모델링과 콘텐츠 혁신이 상인 주도로 상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며, 생활형 시장의 공공적 가치를 재정립해 복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수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남부총괄센터장은 “전통시장 정책은 관 중심·단기성과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상인이 변화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상인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기본기 강화와 소비 회복 전략을 병행해 시장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양은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전통시장은 기존 상인 업종을 존중한 가운데 팝업·콘텐츠 도입과 청년 상인의 시장 내 분산 배치로 유입을 확대하고, 하드웨어 개선과 대규모 연합 사업을 연계한 ‘시장 대전환’을 통해 관광·교통·홍보를 결합한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으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도약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정관 수원남문시장상인회 대표는 “전통시장 지원은 시설 현대화와 지역화폐의 성과를 토대로 단발성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청년 유입,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추진하고, 상생 협력과 전문가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이 다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제언하였다.

송민수 기자

강화군의회, 강남구의회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 방안 논의



강화군의회(의장 한승희)는 지난 22일 강화군의회를 방문한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위원들과 양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상호 교류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강화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

수 정책 사례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의회의 차별화된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강화군의회의 다양한 의정 경험과 지역 발전 노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하린 기자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정착의 벽’ 해법 모색



충남도의회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놓인 농촌의 대안으로 청년농업인에 주목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도의회는 23일 서산시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청년농업인, 지원에서 정착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연암대학교 채상현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농축산 분야 실무 국장, 금융 전문가, 청년농업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현실과 제도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연희 의원은 좌장 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주역이지만, 현실은 빗속 하마”며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영농을 시작하기도 전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금융 장벽에 가로막혀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책·행정·금융이 하나로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채상현 교수는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자체·농림수산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금융기관이 연계된 윈윈 시스템 구축과 초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공공 임대형 인프라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청년농업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재우 농신보 충남지역보증센터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을 위한 신용보증 제도를 설명하며, 보증 비용 우대와 심사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태 예비청년농업인은 “금융기관마다 기준 해석이 달라 대출이 거절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크다”며 성공적인 창농 모델과 정책 조화를 체계화한 ‘등반 루트’ 마련을 요청했다.

이정삼 충남도 농축산국장은 “2026년까지 청년농 3,000명 육성을 목표로 공공형·자립형 투트랙 스마트팜 단지를 253만 평 규모로 조성하고 있다”며 전 주기 윈윈 시스템 지원체계인 ‘충남형 스마트농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진영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은 “단계별 교육 체계와 스마트팜 창농 지원 인증제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덕적도 자연휴양림

예약방법 산림휴양 통합플랫폼 '숲니들e'에서 예약
문의 숲니들e 통합고객센터 : ☎ 1588-3250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 032-899-2860

힐링가득한 덕적도 여행!
덕적도 자연휴양림
 숲니들e 통합고객센터 : ☎ 1588-3250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 : ☎ 032-899-2860